

2032년 올림픽 유치, '20년 집권론'과 묘한 앙상블?

(이해찬 대표)

北 올림픽 유치도시 '평양'으로 결정
체육회, 15일 IOC때 정부보증서 제출

서울특별시와 남북이 공동으로 개최를 추진하는 '2032년 하계올림픽 남측 유치 신청 도시'로 결정된 가운데, 2032년 올림픽이 남북 공동으로 성사된다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강조한 '20년 집권론'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9월19일 평양에서 열린 제3차 남북정상회담 때 '2032년 하계올림픽 공동 개최 추진'에 합의한 바 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한체육회는 11일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에서 정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박원순 서울시장.

/더불어민주당

기 대의원총회를 열고 동·하계 올림픽 정식 종목 대의원 대상 투표를 진행해 '2032년 하계올림픽 유치 도시'로 서울을 결정했다. 서울은 지난 1988년 서울올림

픽을 개최한 이력이 있다. 북한에서는 2032년 하계올림픽 유치 도시로 평양이 결정됐다. 서울은 올림픽 유치를 위해 정부로부터 '국제행사 국내유치 평가'를

받는다. 이후 체육회는 '정부 보증서'를 오는 15일 스위스 로잔에서 열리는 국제 올림픽위원회(IOC) 회의 때 제출할 예정이다.

2032년 하계올림픽 유치를 나선 도시는 서울을 비롯해 인도 뭄바이와 호주 브리즈번 등이다. 이들 도시 중 서울은 올림픽을 유치할 경쟁력이 매우 높은 편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1일 대한체육회 대의원총회 때 "북측 유치도시는 사실상 수도 평양이 정해졌다. 서울올림픽이 곧 한반도 올림픽"이라고 운을 뗀 후 "서울은 역대 올림픽 최초로 5G(5세대 이동통신) 기술을 활용해 서울-평양 동시 개최식을 열 것이다. 또 서울은 1988년 하계올림픽을 성공리에 치른 경험과 유산이 남아 있다"며 유치 경쟁력을 뽐냈다.

박 시장이 강조한 서울의 올림픽 유치 경쟁력 때문일까. 여권 안팎에서는 남북

공동 올림픽 추진 관련 이 대표가 강조한 20년 집권론을 연결했다.

의명을 요구한 민주당 광주시당대원은 12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2032년 남북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2032년 올림픽 유치 도시로 서울이 결정됐다는 소식을 접했다"며 "2032년까지 약 20년이 걸린다. 이 대표는 줄곧 20년 집권론을 강조했다. 2032년 남북 공동 올림픽이 성사되면 이 대표의 20년 집권론은 헛말이 아니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의명을 요구한 민주당 서울시당 대의원 역시 12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2032년 남북 공동 올림픽이 성사된다면 정무적인 판단을 떠나서 매우 기쁜 일 아닌가"라면서 "2032년 남북 공동 올림픽 시기와 이 대표가 언급한 20년 집권론은 공교롭게도 일치하는 구석이 있다"고 했다.

/우승준·배한님 기자 dn1114@metroseoul.co.kr

산업부, 투자 프로젝트 '밀착지원' 나선다

민·관합동 투자지원단 출범
프로젝트별 과장급 전담관 지정
이달 중 '투자헬프데스크' 설치

정부가 투자 프로젝트의 발굴부터 애로 해소, 최종 성사까지 밀착 지원하는 지원단을 민간과 합동으로 구성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민·관 합동 투자 지원단' 출범식을 개최했다.

지원단은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를 단계별로 일괄 지원해 투자 환경을 신속히 개선하기 위해 구성됐다. 상의 및 자동차, 전자정보통신, 반도체, 디스플레이, 바이오, 석유화학, 신재생에너지 등 7개

주요 업종별 협회와 더불어 전력 공급, 산업 입지 등을 담당하는 한국전력공사, 산업단지공단, 산업기술진흥원, 에너지공단 등 공공기관이 참여한다.

지원단은 프로젝트별로 과장급 전담관을 지정해 투자가 적기에 이행되고 애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파급효과가 큰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선 관계 부처, 협회,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전담 지원반'을 구성하며 전담관 또한 실장급 또는 국장급으로 지정한다.

신규 프로젝트 발굴뿐 아니라 일자리 위원회를 통해 발표한 주요 투자 프로젝트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둔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미래차, 반도체·

디스플레이, 사물인터넷(IoT) 가전, 에너지산업, 바이오·헬스 등 5개 산업 분야에서 125조원 규모의 140여개 민간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한 바 있다.

이밖에 신속한 인허가와 규제·제도 개선, 산업 인프라 적기 공급, 주민 수용성 확보 등 투자 애로를 해결하고 초기 수요 창출, 시범·실증 사업 등 기업이 신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시장 창출도 지원한다.

지원단은 이번달 내 8개 상의와 7개 업종별 협회에 '투자 헬프데스크'를 설치할 계획이다. 헬프데스크는 신규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투자 애로를 접수하는 창구로 이용된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



국기에 경례하는 文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과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영균 통일부 장관, 이낙연 국무총리, 문 대통령,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연합뉴스

농식품부, 농기계 수출액 10억달러 돌파

해외에서 국산 농기계인 트랙터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농기계 수출액이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10억 달러를 돌파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990년 1400만 달러로 농기계 수출을 시작한 이래 2018년도에 10억4200만 달러를 기록하며 10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12일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과거 내수시장 의존 전략을 탈피하고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농기계 업체의 부단한 노력과 정부의 지원정책이 결실을 맺은 결과"라고 밝혔다.

품목별로는 트랙터가 전체 수출의 62.6%를 차지하며 전체 수출을 견인하는 만능 역할을 했다.

트랙터는 부착작업기까지 포함할 경우 전체 농기계 수출의 70%를 차지해 수출 전략적 품목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

특히, 미국에 56%를 수출해 트랙터의 본 고장에서도 우리나라 트랙터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또한, 비닐하우스 및 온실에 들어가는 각종 부품 및 자재, 작물생육에 필요한 보온자재 등 시설기자재의 수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시설기자재의 수출 증가는 국내 업체가 품질 및 가격경쟁력을 앞세워 우즈베키스탄 등의 국가에 활발히 진출한 것이 큰 요인으로 보인다.

농기계 업계 관계자는 "농기계 산업이 수출산업으로 한 단계 발전하기 위해서는 북미시장 위주의 수출시장에서 동남아 시장 등 수출 시장 다변화와 기술개발 지원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종·최신용 기자

산업부, 中·중견 국제표준화 활동 지원

정부가 스타트업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의 국제표준화 활동 지원에 나선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은 앞으로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이 개발한 신기술을 국제표준으로 제안하고, 국제표준화기구 기술위원회 신규 설립 및 임원 수임 등을 하기 위한 국제표준화 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국표원은 이날 ▲민간 표준 전문가의 국제표준화 회의 참가 ▲국제표준화 회의 개최 ▲국제표준화기구 기술위원회

의장·간사 활동 지원 등을 포함한 '2019년도 국제표준화 지원계획'을 수립해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 따라 올해 국내 민간 전문가들이 한국 대표단의 일원으로 국제표준화 회의에 참가할 수 있도록 산업계와 연구계, 학계 등에서 126명을 선정해 국제회의 참가를 위한 항공료와 체재비를 지원한다. 또한, ISO/IEC 기술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등 30여개의 국제표준화 회의를 국내에 유치해 우리 기술의 우수성을 알린다는 계획이다.

/세종·최신용 기자

위리어 플랫폼 신중하게 접근해야

최근 육군이 추진하는 위리어 플랫폼 사업에 포함되는 신형 방탄헬멧이 북한군의 88식 소총에 뚫린다는 보도가 나왔다. 내용 자체는 틀리지 않지만, 취재에 신중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여진다.

지난 11일 한 경제지는 '신형 방탄헬멧 北소총에 뚫린다'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기사는 군이 북한의 소총(88식 보총·구소련의 AK-74)이 발사한 탄을 막지 못하는 방탄헬멧을 내년부터 보급할 계획이란 내용을 담고 있다.

신형 방탄헬멧이 북한군의 소총탄을 막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방탄헬멧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는 보도다. 우선 현존하는 방탄헬멧 중 러시아군 일부 특수부대가 사용하는 티타늄 헬멧을 제외하고 소총탄의 직격을 막아내는 헬멧은 존재하지 않는다. 최근 미국의 한 기업이 무게를 줄이면서도 소총탄을 막는 방탄헬멧을 개발했다고 하지만, 아직 실전에서 검증된 것은 아니다.

전문가들은 방탄력만 볼 것이 아니라 전장상황 등 작전환경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한다. 한 군사전문가는 "우리 군이 채택하려고 하는 하이컷(귀부분이 개방된 형태) 헬멧과 귀부분까지 덮는 ACH형 헬멧은 각기 다른 전장환경을 염두해 두고 사용되는 것"이라며 "특



문명철

국방기사 칼럼

수부대의 경우 경량화와 통신장비 및 작전에 필요한 장비의 부착을 위해 방호면적을 희생한 형태를 취하고, 일반 보병 헬멧은 방호면적을 높이기 위해 귀아래를 덮는 형태를 띠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방탄헬멧이 소총탄의 직격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상당한 무게가 될 것이기 때문에 파편과 권총탄을 보호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서 "이러한 방호요구도는 미국, 영국 등 선진국도 큰 차이가 없다. 다만, 작전상황에 맞게 헬멧의 형태와 기능이 변화해 나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형방탄헬멧은 미국 법무부 산하 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Justice·NIJ)의 등급 IIIA 이상의 방호 성능이 적용됐다는 내용도 좀 더 짚어봐야 할 내용이다.

해당 기사는 NIJ IIIA는 구경 9mm 권총탄이 초속 436m로 날아올 때 방호 장구가 파손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수준이

라고 언급하고 있지만, 사실 357 시그탄 및 44매그넘탄 방호 기준이다. (357 시그탄 430m/s, 44매그넘탄 408m/s).

이 등급도 엄밀히 말하면 방탄헬멧이 아닌 방탄복과 방탄플레이트(판)에 적용되는 등급이다. 실질적으로 방탄헬멧의 방탄성능 테스트는 NIJ IIIA와 유사하다고 평가받는 파편방호 규격인 V50을 적용하거나, NIJ 등급을 혼용해 비공식적으로 자체적인 LEVEL 3A를 적용하는 실정이다.

V50은 22구경 17그레인 탄자를 특정 속도로 방탄소재에 충돌시켜 50% 확률로 관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실험으로, 우리 군의 방탄헬멧은 무게를 줄이는 쪽에 힘을 실으면서 후면변형(헬멧 찌그러짐)이 44mm에 달하지만, 외국의 경우 방탄헬멧 착용자의 전투력 유지를 위해 무게보다 후면변형을 낮추는 쪽을 택하고 있다.

육군이 장병의 생존력과 전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위리어 플랫폼 사업에 대해, 언론이 진지한 연구와 성찰 없이 보도를 하게된다면 또 다시 불필요한 방산비리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 때문에 자극적이고 단편적인 보도보다는 차분하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captinm@